

[오피니언]

다산포럼

조영철



세계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비판론이 크게 엇갈린다. 그러나 세계화는 일도 양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를 평가하려면 우선 세계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기간을 제1차 세계화라고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세계화를 제2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1차 세계화는 상품·노동·자본의 국제 이동이 활발했던 반면, 현재의 세계화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만 활발하고 노동 이동은 제한적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란 상품 이동의 자유를 말하는 자유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를 뜻하는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란 두 측면의 세계화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역개방이나 자유무역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대부분이다. 자유무역의 세계화 흐름을 적극 활용한 나라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등은 모두 경제발전에 성공한 반면, 자유무역의 세계화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1차 세계화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지적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 Keynes)도 자유무역은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금융시장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케인스는 국가가 국제 자본흐름을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의 이탈 권력(exit power) 강화로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차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복지제도 확립으로 자유무역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득안정과 보장되고 난 뒤에 통상 개방에 유연해질 수 있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이 복지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일본·미국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출의존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정부가 규모가 큰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기능하는 복지제도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 세계화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지의 적극적 측면을 수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 전략의 성공 추진 조건

경제성장과 빈곤 문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자유무역보다 딜 우호적이다.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자유화·자본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스페인, 뉴질랜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자본유입에 의한 호황 이후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었다.

무역개방이나 자유무역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실증연구들을 보면

세계화에는 자유무역의 세계화와 금융세계화 두 가지가 존재해 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자유무역 세계화는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였던 1950~1960년대 황금기를 가능하게 했고,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도국의 성공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1980년대부터 본격화한 금융세계화의 성공 사례는 자유무역처럼 뚜렷하지 않다. 중국, 인도가 제2차 세계화 시대의 성공 사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정책으로 성공했다

고 보기 어렵다.

자유무역과 금융세계화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들을 종합하면 금융세계화의 부작용이 무역자유화의 부작용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금융자유화·금융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정책보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복지제도 확립으로 자유무역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득안정과 보장되고 난 뒤에 통상 개방에 유연해질 수 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이 복지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일본·미국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수출의존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정부가 규모가 큰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유무역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 기능하는 복지제도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 세계화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지의 적극적 측면을 수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박주철



한국우주소년단은 1989년 창단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영리 청소년단체로 미래의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가 될 필요로 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주를 통한 평화'를 목표로 전세계 30여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청소년단체이며, 지난 4월8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인 이소연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과학실험을 하도록 우주인을 배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단체다.

한국우주소년단은 지난 1990년 15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초등학교 9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100여곳의 초·중·고등학교에 조직돼 있다.

우주소년단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학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요즘 학부모들이 과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영재'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과학영재 시험에 관심이 높아졌다. 쓸쓸할 뿐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에도 이공계 출신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특히 어린이들이 과학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요즘 학부모들이 과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영재'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과학영재 시험에 관심이 높아졌다. 쓸쓸할 뿐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에도 이공계 출신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 주변국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출신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한국우주소년단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광주에 국립 과학관 설립을

1990년 6월 창단돼 내년이면 20돌을 맞는다.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같은 다른 청소년단체에 비해서는 연륜이 짧지만 우주 및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이나 단원들의 열정은 뛰어지지 않는다. 과학실험, 로봇, 로켓, 모형 항공기 만들기 등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우주소년단은 1990년 15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초등학교 9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곳 등 100여곳의 초·중·고등학교에 조직돼 있다.

우주소년단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우주 과학체험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자체적으로 구준히 현장학습과 경진대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학습에서는 전문대, 공룡박물관, 항공 나비생태공원, 대덕 과

학연구단지, 장보고 유적지 등을 찾아 단원들이 과학과 자연에 친숙해지도록 하고 있다.

올 5월 말에는 광주시가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박람회에 광주 출신으로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된 이소연 씨를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주소년단에서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국제 우주과학캠프도 다른 단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다. 지난 8월에는 단원과 학부모 등 140여 명이 일본 규슈의 청소년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 스페인스파인 등을 다녀왔다. 해외의 우주나 과학 관련 박물관과 과

학만 한 다리로 서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물새들이 한 다리로 살 수 있다.

한 다리로 서는 것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함도 있고 물에 덜 젖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아무리 물새라지만 역시 몸에 물기가 젖어있는 것은 체온저하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세가 되었다. 광주천의 제왕도 이 왜가리들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서 있을 때 짹다리나 지지개리가 오히려 편하고 균형잡기 쉬운 것처럼 물새들도 한 다리로 서 때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구만 보면 많은 물새들이 날개가 커서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물새들은 고니같은 큰 물새 조차도 대부분 5kg 이상을 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물새들의 큰 부피는 날개와 치밀한 깃털들이 차지하고 있다. 나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타조 gibi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대한 새들은 아무리 날개가 잘 발달하더라도 결국 봄부에 때문에 날 수가 없다. 인간의 오랜 꿈인 스스로 나는 것 역시 물무

게를 줄이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왜가리는 우리나라 물새 중에서 가장 잘 환경에 잘 적응한 물새로서 원래 여름철 새였지만 이제는 어느 계절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세가 되었다. 광주천의 제왕도 이 왜가리들이다.

황새나 고니 같이 큰 새들이 여객기라면 왜가리나 해오라기는 전투기 가깝다. 그 만큼 빠르고 날렵하며 공격적이다. 더불어 어느 환경에서든 전투처럼 살아남는다.

이같이 한 종이 생태계의 한 위치에 일방적으로 물리는 현상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 하천 생태계는 이 왜가리들이 있어 균형을 유지한다. 자연은 간접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언젠가 반드시 질서를 회복한다. 그 질서복복의 핵심 안에 바로 이 왜가리가 서 있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불법 수입농산물 공매 말고 전량 소각해야

불법 수입농산물의 공매는 농민을 죽이는 제도다. 예전부터 농민들은 이를 금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따리 잣사군이나 밀수로 들어오다 적발된 농산물의 경우 정부는 이 농산물을 공매를 해서 시중에 유통시킨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매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농산물을 비교해 놓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농민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공매로 싸게 사들인 수입쌀을 포대갈이를 통해 감쪽같이 국산으로 둔갑시킨다. 이 쌀이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은 수입쌀인 줄도 모르는 체 사먹는다는 것

이다. 수입쌀을 수입쌀로 내놓으면 소비 문제야 소비자들의 몫이겠지만 우리 쌀과는 밀히 섞여 유통돼다보니 소비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수입쌀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다.

힘들여 농사 지은 농민들은 힘이 빠지는 일이고 소비자들은 정부에 속고 농민당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FTA도 견디며 끊끗이 참고 농사짓고 있다. 농민들이 농사의 유통을 막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시급히 해줬으면 한다. 밀수로 적발된 농수산물은 공매로 시중에 유통시킬 것이 아니라 전량 소각해야 한다. ▲이다웅·여수시 평려동

시설

'균특예산' 삭감 지방균형발전 포기하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확정된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을 삭감,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공공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지방 지원예산에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균특예산 7조6천억원 가운데 1% 수준인 728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예산의 삭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각각 800억원, 5천100억원 수준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균특예산 삭감도 불가피해졌다.

균특예산은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지방지원 예산을 하나로 묶어 2005년부터 편성한 예산이다. 지방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문화·관광시설 확보, 지역 인력양성, 지역 전략 산업 및 복지사업 등에 배정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인 것이다.

정부는 균특예산의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어 지방 지원예산비자 줄이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제 살리기는 지방 살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

U대회 광주 실사단에 '감동'을 안겨주자

광주시가 2013년 개최 U대회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실사 대비 전략을 확정했다. 시는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조성 계획 등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도시의 역할을 집중 훈련하고 뛰기로 유치 열기로 실사단에게 '감동'을 안겨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실사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의 도시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점검하며 종합적 개최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개최 최종은 5월 31일 FISU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실사는 U대회 유치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인 것이다.

경쟁도시는 스페인 비고와 러시아 카잔이다. 세번째 유치전에 나선 카잔이 라이벌로 꼽히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광주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세계여성포럼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권·평화의 도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관건은 유치 열기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U대회 유치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유치 기원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일반인은 물론 초·중·고 및 대학생까지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사 대비전략도 시민 환영이다. 실사단이 광주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공항과 5·18국립묘지, 경기장, 시청 등에 100만명의 시민 환영단을 배치해 '감동의 물결'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전 도청 앞에서는 유치 기원 대축제도 열렸다.

우리에게 2012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성공한 소중한 경험이다. 시민의 대개적인 열기는 실사단의 평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U대회 유치가 광주의 최대 혁신인 만큼 시민 모두가 환영 물결에 동참해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국정부와 언론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행정부 조언을 뒤로한 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발길을 티베트가 아닌 하이난으로 보아오로 돌려 샤오윈장 대만 부총통 당선인을 만났다. 내전후 50년만의 최고위급 간역 회동이었다. 후 주석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공식대화도 완전 무접촉 대만에 손을 내밀어 샤오당선인을 국가원수로 예우했다. 시종 '선생'으로 호칭 했고 만찬에서도 각국 정상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도록 극진히 대접했다.

이는 친중국 성향의 대만 새정부를 통해 분리독립 움직임을 차단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려는 의지다. 또 대만의 기술력과 중국의 자본, 노동력을 결합한 양국 경제협력으로 얻어질 중국경제의 실익이 우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외 우선 실용외교를 기대해본다. /기현호 경제부정 kihh@

<tbl